데스크 시각

낙인(烙印) 찍는 사회

채 희 종
사회부장

"가슴을 베인 것처럼 눈물에 데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일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조선 시대 노비의 삶을 다루며 2010년 방영된 KBS2 드라마 '추노'의 메인 OST로, 가수 임재범이 부른 '낙인'의 가사 중 일부이다. 쇠꼬챙이로 가슴을 지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천형처럼 지워지지 않는 노비라는 낙인,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고단한 삶이 절절히 전해지는 대목이다.

낙인은 애초 특정 문양의 쇠붙이(도장)를 불에 달구어 찍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가축이나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썼으며, 이후 범죄자나 도망한 노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낙인의 용도는 더욱 다양해졌다. 현대에 와서는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는 행위나 성향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됐다.

물리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더라도 낙인은 살이 타는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이후 생긴 마음의 상처는 한층 삶을 옥죄고 정신까지 파멸시킨다. 낙인은 찍히는 대상에게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집중함은 물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낙인의 또 다른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다수가 소수에게, 강대국이 약소국에 낙인을 찍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폭력과 탄압의 형태로 표출된다. 더불어 낙인찍는 자는 낙인찍힌 자에 대한 지배력을 영속시키기 위해 차별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낙인찍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강화한다. 낙인찍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좀체 반성하지 않는 이유이다.

혐오·차별을 동반한 폭력

다수가 소수를 배척한 예로는 우리 사회의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병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정신병 환자를 범죄와 공포라는 단어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73년 시행된 모자보건법이다. 이 법은 정신병 등 비정상인 모든 것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정한 정신 질환자는 강제 불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제 보호시설 여성 9명에게 강제 불임 시술이 시행됐다. 이는 나치의 인종 차별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다.

사라져야 할 반역사적 행위

국가 간 힘의 우열로 인해 생기는 낙인찍기는 현재도 되풀이되고 있다. 1923년 9월 발생한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은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거나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또는 폭동을 일으켰다 등 다양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지진으로 인한 일본 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불순한 존재로 낙인찍었던 조선인을 상대로 분노와 혐오를 유발해 수천 명을 학살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입증된 학살임에도 일본 우익들은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인 참전이었다'며 지금껏 조선인에 대한 낙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낙인찍기는 역사마저 거스른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12·12쿠데타 세력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검증과 평가를 받아 민주화운동으로 승격됐다. 여기에 무려 40년간 정부와 사법 기관이 아홉 차례에 걸쳐 5·18은 북한군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극우 세력은 여전히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내려와 일으킨 폭동이라며, 5·18에 대해 '폭도' 또는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대고 있다. 애초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낙인을 찍기만 하면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의 한 귀퉁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낙인은 그 자체가 양심에 어긋난 행위라는 사실이야 역사 속에서 증명돼 왔지만 최근 5·18 낙인찍기로 재미를 본 이들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일약 극우 세력의 황태자로 떠오른 자가 있는가 하면 나름 정치 권력을 얻은 자들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얼마 가지 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양심과 바꾼 서푼 짜리 권력을 거머쥔 세력들은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낙인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 낙인의 문구가 어떻게 될지 기대되지 않는가.

/chae@kwangju.co.kr

은펜칼럼

보수 정당과 극우 정당의 경계선

최 영 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북미 정상 회담의 와중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황교안 씨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는 전체 득표율에서 50%를 얻었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55.3%를 획득했다. 황교안 씨의 당원 득표율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5·18 폄훼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김진태 의원이 당원 득표율에서 무려 21.8%나 득표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함께 5·18 폄훼에 앞장섰던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당당히 입성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이 존재하는 게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들 세력이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 사회의 민주주의에는 빨간 경고등이 켜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이 경고음에 맞추어 민주 정당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예를 들어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자 프랑스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은 무소속 후보인 마크롱을 지지하여 르펜의 집권을 막았다.

2017년 독일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 3당에 올라 독일 민주주의를 위협하자 양대 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경쟁을 멈추고 공동 정부를 구성했다. 사민당은 공동 정부를 구성할 경우 자당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많이 망설였지만 국민들이 극우 세력들의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정부 구성을 촉구했고 이에 사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이에 응한 것이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극단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면 이해관계를 떠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민주 정당의 참 모습이다.

대부분 민주국가에는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한다. 대개는 자본주의를 모토로 하는 합리적 보수 정당,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온건 진보 정당이 정치의 양축을 이루고 맨 오른쪽과 맨 왼쪽에 각각 극우 정당과 공산당 등이 존재한다. 여기서 정치의 양축 중 하나를 형성하는 보수 정당들은 대개는 19세기에 형성된 자유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다. 여기서 19세기 자유주의가 내건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대의제 민주주의, 사유 재산제의 보호 등이었다.

반면 우리가 흔히 극우 정당으로 일컫는 독일의 나치스나 무솔리니, 오늘날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독일의 AfD,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신 체제나 전두환 체제 등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부정 내지 경시하고 인권 유린에 앞장섰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의원이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순례 의원 등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5·18 북한군 침투설' 및 '전두환 영웅론'과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고 국론 분열에 앞장섰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들 극우적 인사들을 당내에 두어서는 안 된다. 김진태·김순례 의원 같은 극우적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별도의 극우 정당에 몸담도록 해야 정상이다. 그래야 자유한국당도 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과 극우 정당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필요하면 전두환과 박근혜의 정치 노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히 위험한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극우 정당인가 보수 정당인가? 극우 정당이 아니라면 당장 당내 극우 세력들을 축출하라.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란 말처럼 자유한국당은 작은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하루빨리 진정한 민주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조언이다.

기 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해야

최 영 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환경수사담당

청소년을 신인류(新人類)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성세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청소년은 연령으로 구분하면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법률 중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법이라는 용어를 붙인 유일한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체하며 1997년 제정됐다. 청소년은 외부의 자그마한 환경에도 쉽게 반응하므로 주류나 담배 등 유해 약물과 영화·비디오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유해 매체물 등 각종 유해 환경에의 노출을 차단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장치를 해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에 따른 부작용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 음주가 학업 지장, 학교 폭력,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청소년의 음주 폐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음주는 청소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지난 5년간(2013~2017년)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음주 운전 사고는 모두 2468건으로 매년 평균 493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0년 922명이던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가 2017년에는 1968명으로 2.1배로 불어났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는 처벌하지만, 술을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성인 행세를 하며 술을 시킨 뒤,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주류를 구매했다고 한다. 광주 지역의 경우 2018년 한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129곳 이었다.

광주시 민생 사법 경찰이 활동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분야 유해 약물 판매 금지 위반,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1건에 35명을 사법 조치하여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로 인해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물론 국가에서는 유해물 차단과 성인 인증을 통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모든 유해 환경이 차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원 등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전 계도 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외적인 영역은 국가와 관계 기관·단체에서 노력하고 내적인 영역은 각 가정에서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 7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치료를 위해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의존 예방·해소, 청소년 캠프 운영 및 학부모 교육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을 제공하는 신·변종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 매체물 배포·게재 행위,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밝고 활기차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책임감,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책무일 것이다.

社說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에 숨 쉬기도 어렵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안개 속 초미세먼지로 서남해안 뱃길마저 막히고 공항에서는 여객기 결항·지연 사태가 잇따랐다. 이쯤 되면 가히 '미세먼지 대란'이라 할 만하다. 지난겨울엔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고 했는데, 올봄은 '삼미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안개와 먼지의 영향으로 어제 목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여객선 대부분 발이 묶임에 따라 흑산도 등 섬으로 가는 승객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여객기 10여 편도 지연하거나 결항했다. 새 학기 첫날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갔으며 운동장에 나오지 못하고 창문도 열지 못한 채 교실에 갇혀 지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거의 일주일째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이다. 초미세먼지(PM2.5·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 경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경우 발령한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1일 이후 초미세먼지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으나 잿빛 공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지만 '비상한 인식'에 걸맞은 뾰족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같은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미세먼지 집중 배출원의 분포 등을 파악할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들도 차량 운행을 자제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가동을 대폭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탈원전 정책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순환로 협약 이면 거래 여부 조사해야

지난 2016년 12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광주시 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 협약 체결 이후 시의 재정 지원금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데 이어 최근 재판에서 수납 및 도로 시설 관리에 대한 통합 관리 업체 선정을 놓고 맥쿼리와 당시 광주시장 캠프 관계자 등이 속한 업체가 수차례 협의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A산업개발이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를 상대로 낸 '통합 관리 선정 업체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 확인을 기각하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도 각하했다. A산업개발은 전 시장 캠프 관계자인 김 모(52) 씨가 사내 이사로 재직한 업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1구간 통합 관리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 수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경 협약 체결 전인 2016년 9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주)광주순환도로투자 관계자가 A산업개발 측에 구간별 손익계산서 분석, 최소 운영비용 추정치 등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맥쿼리의 임원은 2017년 2월 김 씨에게 "전에 비해 간극이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정안 개요 등을 보냈다고 한다. 이 같은 협의는 맥쿼리와 김 씨, 광주시 간 어떤 이면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을 보여 준다.

광주시는 2016년 당시 변경 협약에 따라 2028년까지 1014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 3년간 지원금이 협약 변경 전에 비해 19억여 원이나 증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1구간 변경 협약 과정에서 김 씨와 김 씨가 속한 업체 및 단체가 맥쿼리 등과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고 이면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이젠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오는 2026년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육체 근로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앙코르 커리어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新)중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직장에서 은퇴를 한 50~60대 또는 더 건강하고 똑똑해진 만 60~75세 사이를 그처럼 부르며 고령자나 노인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보다는 '신중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게 사실이다.

노년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노인 빈곤층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사회 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제 소득 하위 10%가구의 66%가 65세 이상 가구로 나타났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최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프리드먼은 다시 한 번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rior)를 제안했다. '앙코르'(Encore)는 다시 청한다는 뜻이요, '커리어'(Career)는 경력·직업·직장을 의미한다. 이를 직역하면 '다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는 뜻이다.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인 '인생 이모작'과도 같은 맥락이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은퇴 이후 삶이 어느 때보다 길어지면서 은퇴자들에게 '앙코르 커리어'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쏟기보다는 은퇴자들이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환경과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인생 2막은 당연히 본무대보다 길고 빛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중년들이 자신의 사회 경험 등을 십분 활용해 여전히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감동을 선사해 줄 앙코르 무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